

다음 주 시설공사 입찰 12건 40억원 규모 진행

도내에서 다음 주 총 40억원 규모의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강원지방조달청의 '조달청 물품·용역 시설공사 주간입찰동향'에 따르면 오는 27일~12월1일 닷새간 도내 시설공사 입찰내역은 총 12건으로 규모는 40억원으로 집계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1억8,625만원 규모 '국립춘천박물관 야외시설 개선공사'가 가장 먼저 진행된다. 시설공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30일 입찰마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의 '강릉유천 B1, B2 블록 강화합판마루 구매'이며 25억2,404만원이다. 내달 1일 마지막 입찰 공고는 강원지방기상청의 '2018년도 기상관측지원 및 시설관리 용역' 건 (1억6,542만원)이다. 유재규기자

한반도 '지진공포' 속 노후 인프라 불안 커지는데

SOC 내진보강 예산 4년뒤엔 '바닥'

포항 지진 여파로 도로·철도 시설이 손상된 가운데 오는 2021년 이후에는 SOC(사회기반시설) 내진보강 예산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일부 도시철도와 수자원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도로·철도 시설의 내진보강이 완료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내진보강 예산 급감에 따라 SOC 내진 성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 SOC 내진보강 예산 편성 규모는 1139억원으로 올해(1897억원)보다 무려 40.0% 축소됐다. 도로 내진보강에 412억원, 철도 내진보강에 677억원이 책정됐고 수자원 시설에 50억원이 편성됐다. 수자원 시설 내진보강에 신규 배정된 예산을 빼면 도로는 올해 대비 42.1%, 철도는 42.9%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SOC 내진보강을 서두르면서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 1139억으로 거의 반토막 2020년까지 年100억~200억 불과 대규모 피해 막을 선제적 투자 필요

서둘러 집행했다"며 "내년 SOC 내진보강 예산이 줄어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에는 도시철도와 수자원 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을 중점 추진해야 하는데, 이들 시설의 내진보강에 책정될 예산은 2020년까지 연간 100억~2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내진보강 예산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SOC 내진보강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정부의 SOC 내진보강 완료 천명에도 불구하고 SOC의 지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대구~포항 고속도로 구간 중 포항IC 12교, 학전3교, 화대천교 등 교량 4개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 11개가 손상됐고 현재 건설 중인 포항신항 인입

철도의 연화제4교, 남송교 등 교량 2곳도 빔이 최대 20mm 정도 밀려나는 변형이 발생했다.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와 일반부두, 포항신항, 포항구항 등의 항만시설도 균열이 생기고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후 SOC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SOC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SOC의 경우 정밀 점검과 긴급 보수를 거쳐 정상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부 노후 SOC는 추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나 학교 시설 만큼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SOC에서도 일부 손상이 발견됐다"며 "노후 SOC에 대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SOC 내진 성능에 대한 재점검과 내진보강 예산의 확대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국토부,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안 가다... '불균형' 우려 목소리

발주기관 관행은 '하지부지'... 원도급 책임은 '이중삼중'

건설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불공정 TF(특별팀) 개선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발주기관-원도급 관계보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일어나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에 담긴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은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상향,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사회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망이다.

반면 공공 발주자의 대표적인 갑(甲)질로 꼽히는 간접비 미지급 해소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불공정 TF에선 지금까지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률 상향과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등이 집중 논의

됐다. 구체적으로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을 현행 '60% 미만'에서 '68%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 없는 하도급률 인상은 원도급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도급 낙찰률의 상향조정 없이 하도급률만 68%로 올리면 원도급자들이 밀리고 하도급을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도급자들의 '갑갑이 일할'을 막겠다며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공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종별 원도급금액 공개는 사실상 하도급공사 예정가격을 공개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비공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등 공공 입찰 때 하도급률이 높을수록 기점을 주

하도급률 상향·임금지급보증제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등 원-하도급 관계만 집중 논의 간접적정비 해법은 기대이하

거나 상호협력평가 시 하도급률에 따라 최대 5점의 입찰가점을 주는 방안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임금지급제,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질 개선대책'도 대개 개선안에 포함된다.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의무화하는 임금지급제는 체불이력이 있거나 체불이 예상되는 부실화 징후 기업 등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체불이력이 없는 정상업체까지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재산·영업권

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다.

보증기관이 3개월분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되, 공무원가에 이를 반영하는 임금지급보증제는 이미 시행 중인 '소액채당금제'의 보완·개선 속도를 보고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적정임금제는 도입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재 노무비 전체를 가격경쟁항목에서 빼거나 노무단가만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노무비를 뺀 재료비, 기계경비, 간접노무비를 저가투찰해야 하는 현행 입찰시스템상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담은 근로자 사회보장강화방안은 보험료와 공제부금의 납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도입 명분이 달라진다. 종합건설업계는 납부주체를 '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형건설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나 입찰담합으로 처분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발주자의 갑질관행 개선은 간접비 문제가 유일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간접비 산정·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총사업비 조정 대상사업 및 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신청 시기·회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개선안이 균형을 잃고 원도급사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kth@

강원 인프라 예산 갈수록 위축

내년 투자규모 1.4조원으로 축소
2021년에 1.1조원으로 줄어들 듯

평창 올림픽시설 완료 이후
대형 프로젝트 찾기 어렵고
고령층 증가로 복지비중 늘어



강원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87건의 사업에 33조15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은 17.5% 정도다. 구체적으로 수송 및 교통 37건(2조1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건(6조7088억원)이다.

문제는 도내 인프라 투자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 도는 인

프라 관련 시설에 1조63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1조4610억원으로 감소한다. 투자 규모는 이후 해마다 감소해 2021년에는 1조1829억원으로 떨어진다.

도의 SOC 투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도가 수송과 교통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 비중은 5%다. 이는 전국 평균인 9.2%의 절반 수준이다.

도내에서 인프라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이유는 도에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의 건설이 올해 완료되면서 내년부터 공사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고령층의 증가 등으로 복지관련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도는 2021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총 7조4764억원(79건)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재정의 32.8% 수준이다. 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SOC 분야보다 2배가량 많은 셈이다.

도내 SOC 투자가 감소하면 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도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SOC 예산 감축으로 내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0.5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평균 예상치 0.34%포인트 하라보다 높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이 완료된 이후 도내 신규 사업을 찾기 어렵다"면서 "도 경제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하이원추추파크 경영정상화 가능할까?

(강원랜드 지회사)

경영개선위해 84억원 필요
최종 결정 차기 경영진에 맡겨
내달 21일 신입사장 추중 주목

강원랜드의 마지막 지회사 하이원추추파크 경영정상화가 가능할까?

강원랜드는 강원 폐광지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지회사 3개를 설립했다. 이 중 태백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휴

업 상태이고, 영월 하이원산동태파크는 개장도 못한 채 행위중독 예방 치유

센터로 사업이 변경됐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회사 삼척시 도

계유 하이원추추파크도 만성적자 상태다.

하이원추추파크는 옛 영동선 철도시설 터에 조성한 철도 체험형 리조트로 2014년 10월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하자마자 적자를 냈다. 하이원추추파크는 경영정상화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경영구조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보고서는 비용 절감 노력으

로 손실 폭 감소 추세지만, 'EBITDA(법

정이익)가 매년 최소 마이너스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2022년까지 누적결손금은 398억원으로 추정했다.

원인은 겨울철 이용률 급감, 기상악화-야간-숙박 시 이용시설 부재, 핵심시설 레일바이크 경쟁력 부족으로 분석했다.

현 상황에서 검토한 청산, 매각, 자금대여, 경영구조개선 4가지 전략 중 경영구조개선을 최선으로 판단했다.

경영구조개선안 주요 내용은 겨울철 체험시설 운영중단-관련 인력 활용, 마케팅 지원, 유상증자 등이다.

유역 보고서는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최소 8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입금 상환액 23억원, 최소 운영자금 27억원, 시설개선비 34억원 등이다.

하이원추추파크 경영구조개선안은 지난 10월 강원랜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사회 결의 등 최종 결정은 차기 경영진에 맡겼다.

강원랜드는 현재 신입 사장-부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임 사장-의결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다.